

# 이태원 유가족 “요구 외면·후속방안 없는 대통령실...절망 느껴”

### 이태원 유가족, 분향소 앞에서 159배 진행 “대통령비서실, 요구사항 답변 없이 행안부 이송” “유족들 2차 피해 호소...대통령 사과 촉구한다”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자녀...이제 편하게 쉬길”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단체가 대통령비서실이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에 답변하지 않고 후속방안을 제시하거나 사과하지도 않았다며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대책위)는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이태원광장 합동분향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49일 추모제 당시인 지난달 16일 유가족의 6가지 요구사항을 대통령비서실에 전달했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이에 답변하지 않은 채 행정안전부에 이송했다”며 “행안부는 경찰 수사로 책임소재가 밝혀질 것이고, 2차 가해 대응은 이미 조치하고 있다고 지난 9일 답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이 제시한 요구사항

을 사실상 이행할 의지가 없음을 밝힌 것”이라면서 “협의회는 대통령비서실이 유가족의 절박한 요청에 직접 답변하지 않은 것에 절망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 ▲성역 없는 엄격한 철저한 진상규명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규명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과 인도적 조치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조치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대책 등 6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유가족 단체는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셸프 수사로 워선 수사를 포기하고, 유가족에게 브리핑 한번 없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며 “2차 가해로 159번째 희생자가 세상을 떠났다. 다수의 유가족이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가족에게 책임을 인정하고 후

속 방안을 약속하는 대통령의 사과도 없었다”며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영하 1도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유가족과 대책위 관계자 19명은 분향소 앞 바닥에서 영정을 향해 159번의 절을 했다.

심규협 대책위 공동상황실장은 20번의 절을 할 동안 ‘진상규명 기원’, ‘책임자 처벌 촉구’, ‘2차 가해 방지 대책 촉구’, ‘희생자 명예회복’, ‘생존자·목격자 회복’,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 장관·서울시장의 진정한 사과’, ‘행안부 장관 사퇴’, ‘독립적 조사 기구 설치’ 등을 기원했다.

21번째 절부터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가족, 소중한 사랑스러운 딸, 누구보다 사랑스러웠던 아들, 심장과 같았던 아들, 아플 때마다 가족 곁을 지켰던 가족, 항상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해준 가족, 항상 사랑받아야 할 사람 등 희생자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안식을 기원했다.

유가족들은 절하는 도중 영정을 향해 흐느끼며 울기도 했다. 심 공동상황실장도 희생자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다가 눈물을 흘렸다.

이들은 이날 오후 8시에 이태원광장 분향소에서 159배를 진행할 계획이다.

159배를 마치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에서 1인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이정민 협의회 부대표는 전날 오전 11시에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이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유가족 및 단체는 참사 발생 100일 하루 전인 다음 달 4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용산

구 녹사평역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서 서울역과 광화문을 향해 ‘100일 추모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2시부터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광장에서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개최한다.

최이슬기자

## 광주 시민단체 “근로정신대 해결, 구결 외교 중단하라”



광주 지역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가 정부의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일 외교 방식을 비판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광주전남여성사정의평화행동(준)은 1월 31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피고 기업들은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근로정신대 피해) 배상 명령을 조속히 이행해야 할 대상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성의를 구결하거나 호응을 사정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정부는 지난 12일 형식적인 공개토론회를 갖고 가해자인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행

### “정부 방안은 일본에 성의 구결하는 꼴”

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걷어 피해자들에게 대신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며 “정부는 이와 관련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주문하고 있지만, 일본은 요지부동”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전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일 양국 국장급 회의에서도 일제 강제동원 문제가 논의됐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 이후 5년이 지나는 상황에서 정부는 성의 표시를 구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일본은 한술 더 떠 ‘추후 피고 일본 기업에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지 말라’는 내용의 구상권 포기각서까지 들이밀고 있다”며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권 포기각서를 요구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은 한국 재단이 피고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확정되면 과거 정부의 답화를 계승하겠다고도 한다”며 “그러나

일본은 그간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 표명을 하면서도 단 한 차례도 불법 행위를 인정할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통절하게 반성한다면 당사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판결대로 배상하면 될 일”이라며 “정부는 피해자를 욕보이면서 가해국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망국·구결 외교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국연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는 “외교부는 지난 설 직전 양금덕 할머니를 포함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을 만나 (정부 배상안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법적으로 보장되는 대법원의 강제집행마저 막아선 외교부가 뻔뻔하게 피해자들을 만나려 한다. 외교부가 또다시 피해자들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올 경우 허용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양금덕(93) 할머니도 “정부는 책임지고 일본으로부터 반드시 사죄를 받아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우나기자

## 지난해 병원·의원 등 의료시설 화재 177건

지난 한 해 병원·의원 등 의료시설에서 177건의 불이 난 것으로 집계됐다. 고의로 불을 지른 경우도 7건 있었다.

1월 31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의료시설 화재발생 건수는 177건으로 전년도 140건에 비해 37건(26%) 증가했다.

이 불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났다. 이는 부상자 3명이 발생했던 2021년에 비해 인명피해가 2명 늘어난 것이다.

의료시설별로는 ▲병원 46건 ▲의원 34건 ▲종합병원 21건 ▲한의원 16건 ▲치과병원 14건 ▲요양병원 7건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작동기기 109건, 담뱃불·라이터불 37건, 불꽃·불티 11건 등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전기적요인 74건 ▲부주의 59건 ▲기계적요인 15건 ▲방화 7건 등이 요인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방화 7건은 모두 성냥, 라이터에 의한 방화로 조사됐다. 방화동기는 단순우발, 불만해소, 정신이상 등이 각각 2건, 기타 1건으로 집계됐다.

의료시설은 가연물이 다수 있어 화재 위험성이 높고, 거동 불가 환자 등이 거주해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계자의 각별한 주의와 제대로 된 소방훈련 교육이 필수적이다. 이에 소방청은 최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의료시설에 대해 불시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평가할 수 있게 했다. 또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해서는 훈련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화재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2026년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에 보급 설치하고, 의료시설의 효과적인 소방계획 수립을 위해 의료시설 전용 소방계획서를 작성해 배포하도록 개선했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의료시설 관계인은 평소에도 의료장비·전기시설 안전 점검과 소방 교육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아울러 화재에 가장 효과적인 소방시설이 스프링클러 설비인 만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2026년까지 설치하도록 돼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조기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털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